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폐지 반대 목소리

민주 김윤덕 의원 "허위정보로부터 주민 보호… 충분히 보호받아야"
문체부·언론재단 등에 "적극·진보적 전면 대응 나서야" 주문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와 통합 문제에 대해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에 근거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등)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여론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2022년 114억7,000만원, 2023년에는 95억 2,500만원으로 약 10% 축소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역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큰 위기는 기금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 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꾸준히 통합 이관을 주장하는 중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과정, 그리고 존치평가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다"며 "'2017년부터 2019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주요 내용은 △로컬 저널리즘 역량 강화 △지역여론 활성화 △지역신문 공익성 제고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6년이 지난뒤 2022년 올해 문체부가 발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2022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간 차별화를 위해 △지역공론장의 다양성 확대(여론활성화) △지역저널리즘 역량 강화 △지역신문 공익성 제고 등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쓰여있어 영어가 국어로 바뀐 것 말고는 내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난 6년간 문체부가 지역언론의 암울한 위기 상황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살려내려는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체부가 이렇게 복사하기, 붙이기로 일부러 안일하게 대처해서 기재부와 함께 지역 언론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려는 의도인가?"를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정치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중앙과 지방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는 지역의 의견과 정보를 이슈로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신문은 인력, 자본, 인프라, 정보가 부족하지만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인 만큼 전혀 성격이 다른 기금"임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 용역이나, 의견 수렴 전 과정을 상세히, 그리고 수시로 의원실과 공유해서 기재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김경수 기자

국회 기재위 국감 준비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24일까지 회기 일정

내년 예산 편성 위한 동의안 · 조례안 100여건 처리 예정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4일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달 24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일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2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7일 김대중(익산1)·박정규(임실)·임승식(정읍1)·이명연(전주10)·박정희(군산3) 의원이, 18일 전용태(진안)·염영선(정읍2)·박용근(장수)·권요안(완주2)·김정기(부안)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다른 회기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은 상황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 실시될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이 가려운 곳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민주 도당, 여성 · 노인 청년위원장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여성·노인·청년위원장 등 주요 상설위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장 이병도 전북도의원)를 통해 여성·노인·청년위원장을 후보자 공개모집 후, 해당 부문 권리당원의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노인·청년위원장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상무위원회 찬반투표로, 응모자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모집 후 19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尹정부, 대북 확장억제 카드 '만지작?'

전술핵 재배치에는 "NPT 체제" 선 긋기
美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등 거론돼
7차 핵실험 시 억제력 획기적 강화 차원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안보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핵공유' 요청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미국 측과 여러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부대 훈련 공개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더욱 엄중해지고, 올 들어 꾸준히 제기됐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확장억제 강화 목소리가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부대 훈련 종료일이라고 언급했던 날에서 사흘 뒤인 지난 12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하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1991년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식의 실질적 핵공유를 통한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등이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 전략자산이 공개적으로,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무력시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사거리 45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이는 괌의 미군기지를 목표로 설정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을 대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당국간 전략자산 전개 논의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모든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21일까지

이선덕 의원, 5분 발언서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절실"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21건의 부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군정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현장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임정호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세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선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부안면 복분자 유원지의 최적 입지 조건을 활용한 대규모 꽃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정원과 연계한 꽃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장 정미경 | 백운농협 조합장 신용빈 |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신인성
진안농협 조합장 허남규 | 부귀농협 조합장 김영배 | 무진장축협 조합장 송제근